

“재생에너지로 전북경제 재구조화”

‘도지사 출마’ 민주당 이원택 의원, “20GW 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글로벌 기업 유치 핵심 동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복을 ‘재생에너지 중심 신경제 지역’으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화석연료 중심 경제에서 빠르게 재생에너지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풍부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 11GW(기가와트) 구축을 시작으로 추가 확장을 포함해 총 2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체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대”라며 “삼성·SK·현대·LG 등 국내 기업도 2040년 전후 공급망 전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투자자를 정할 때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며, 전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글로벌 첨단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 김관영 도정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 등 경쟁 지역은 속도를 높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복을 ‘재생에너지 중심 신경제 지역’으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 산업 기반을 선점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전북형 재생에너지 전략을 다시 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2.4GW) 계획을 주도했고, 전북도 정무부지사 시절 부안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성사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전북 재생에너지 사업의 골든타임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 전역에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

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자신이 발의한 ‘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지 조사, 인허가 지원,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전 과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산업은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을 크게 끌어올릴 성장 동력”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금화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15년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 세계적 RE100 산업기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적인 미래 전북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기자회견이어서 주목받았다.

미래성장·안전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 ‘속도’ | 도, 15~19일 주요일정 공개

거점국립대 육성 상호협약

안전 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부터 19일까지 미래 성장 전략부터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정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전북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전 주간 브리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전북대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연구 분야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전북도와 전북대학교는 ‘거점국립대 육성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 중인 ‘5군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지역 연구·산업 생태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인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전략 세미나’에서는 특별자치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특례 방안과 관련 법제 개선을 논의된다. 도는 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16일에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사가 이어진다. 전북도는 ‘2026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12일 오전 주간 브리핑을 열고 15~19일 도정 주요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품질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32개 품목을 새롭게 선정한다.

도는 인증 이후 제품 홍보·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만 물류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향만 물류 연구·자문화’가 개최되어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물류 기반을 분석하고 도시 경제와의 연계 전략을 논의한다.

도는 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일에는 기후변화 시대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관리 점검이 이뤄진다.

전북도는 도내 지방하천 458개소를 대상으로 한 ‘제방 정비 평가’를 이미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읍시와 임실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남원시와 진안군은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리며 재해 예방 체계 구축에서 성과를 보여줬다.

이어 열릴 예정인 ‘2025년 전북자치도 안전 감찰 전담 기구 협의회’에서는 2026년 안전 감찰 추진계획과 성과가 공유된다.

도는 생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릴 예정인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관광진흥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게 되며, 전북관광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전략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18일에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가공식’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결도로는 새만금 개발 지역을 항만·공항·철도와 직접 연결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철태 대변인은 “새만금 연결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전북 미래로 향하는 전략적 인프라”라며 “‘새만금, 도로를 넘어 내일을 잇다’라는 의미를 담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인 ‘기업 애로 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민원·행정 분야의 우수 대응 사례가 공유되며 기업하기 좋은 행정 환경 구축에 기여한다.

또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는 도의 주요 현안과 국회 차원의 지원책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주 마지막 일정인 19일에는 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 보강이 이뤄진다. 전북도는 ‘신인 의용소방대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해 2026년도 신임 대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하자”

도내 14개 시·군 생태자산 활용·연계

전복의 독보적 청정 자산인 생태와 환경자산을 이용해 생태관광 트렌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간 생태자산을 활용 연계시킨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조성하자는 역설적인 제안도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생명경

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전북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생태관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전북 생태관광 2.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우리 지역이 동부산악, 중부평야, 서부도서연안 등 다채로운 생태·환경자산을 보유해 생태관광을 추진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은 향후 전북 생태관광이 나아가야 핵심 트렌드 변화로 △지역

특화자원 경험, △분야 간 융합,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관광 대상 확대를 꼽았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과 ‘전북 생태관광 플러스(+)’ 기본계획(2025~2034)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의 경우 14개 시군 총연장 1037km 길이의 걷기길과 자전거길, 맨발황토길을 연계시키고, 시군별로 1개 대표 콘텐츠를 발굴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기능을 재편시키는 방안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고부면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은 지난 11일, 정읍시 고부면사무소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복형 의원은 2010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나눔을 이어오며, 올해로 ‘16년째’ 지역사회에 은정을 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해야”

민주 도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염영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주 4·3 사건은 남포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희생을 낳은 비극”이라며 “특히 박진경 대령은 강경 진압과 민간인 학살 책임이 있는 국가 폭력의 중심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물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된 것은 4·3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

판했다.

전북도당은 또 “권요를 국가보훈부 장관은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임명했지만, 박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은 오히려 국민분열을 심화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통합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이는 장관의 역사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전북도당은 “권요를 장관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 외부 음향장비 반입 금지 명문화

민주 윤준병 의원, ‘나경원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



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의장·위원장의 사용 중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의 마이크 차단 이후 한 의원이 개인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이어간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국회법은 ‘회의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편법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회의 방해 물건에 ‘국회 미제공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명시하고 △의장·위원장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윤리특위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장의 발언 제지를 개인 장비로 무력화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편법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회의 질서 확립과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내년 본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의회 예결특위, 도 10조1678억·교육청 4조4398억원 의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 11)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총 10조1,88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해 추경 시, 필요 재원을 재산정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총사업비 118억원 중 45억원, 9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직속기관 시설(8억 원 삭감)’은 직속기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 관련 예산 편성 기준 및 단가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육상 및 외벽 방수·배수로 시설 등’ 일부 사업에서 과다 편성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총사업비 78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였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0조5,865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1건에 2억4,0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4,437억 원 중, ‘예유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13억원 전액 삭

감)’ 등 총 19건에 39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수산기술연구소 소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과 보건의료과 소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20억원 삭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해 추경 시, 필요 재원을 재산정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총사업비 118억원 중 45억원, 9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직속기관 시설(8억 원 삭감)’은 직속기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 관련 예산 편성 기준 및 단가 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육상 및 외벽 방수·배수로 시설 등’ 일부 사업에서 과다 편성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며 총사업비 78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였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0조5,865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1건에 2억4,0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4,437억 원 중, ‘예유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13억원 전액 삭

감)’ 등 총 19건에 39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수산기술연구소 소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과 보건의료과 소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20억원 삭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반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해 추경 시, 필요 재원을 재산정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총사업비 118억원 중 45억원, 9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전북여성재단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2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 기관인 전북여성가족재단 허명숙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과 조직 운영 비전, 공직 윤리 의식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답변이 재단의 주요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재단의 주요 기능인 젠더 관점 정책분석과 성인지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들은 후보자가 언론,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풍부한 이력을 강점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책을 실제로 총괄·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뚜렷한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만호 기자